AI 학습,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기업혁신·시장경쟁 활성화 추진

공정위,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개인정보 가명 없이 AI 활용 가능
자율주행·음성·영상 정확도 향상
개인 캠핑카 공유 플랫폼 등 허용
주류시장 경쟁촉진·행정부담 완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 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6개월 연속 감소

노동부 '고용행정 통계 동향' 발표
구인배수 0.43, 11월기준 최저 기록
1~11월 실업급여 11조 '사상 최대치'

제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6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3만4000명 줄었고, 전년 동월 증가폭도 17만8000명에 그쳐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7월(18만명)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뒤 8월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축소됐다.

노동부는 연말 계약직 종료 영향으로 상시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초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 ▲10월 1만4000명 ▲11월 1만6000명으로 매달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국인만 따로 보면 제조업 고용 감소는 2023년 10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국인 가입자가 3만1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5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줄며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9만2000명 줄어 39개월째 감소했고, 40대도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50대(4만2000명), 30대(7만8000명)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인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낮아졌다. 이는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11월 기록이다. 기업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8000명(-4.6%) 줄고 구직자는 1만2000명(3.3%) 늘면서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 영향이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배수가 '고용24' 플랫폼 기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에 제조업 구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보니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19억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지급액만 보면 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6.0%)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8만4000명)와 전체 지급자(52만8000명)는 각각 6000명(-6.4%), 1만5000명(-2.7%)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공제회·협성문화재단 협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이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두 기관은 2011년부터 협업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등록금 전액과 학업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가운데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 2025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자녀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20명을 선발한다. 제출서류와 세부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협성문화재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6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장학생은 매 학기 일정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성장동력·경영구조·고객신뢰 재정비"

농어촌공사, 117주년 KRC 혁신 선언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8일 창립 117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공사의 영문명칭)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RC 비전데이'를 열고 경영혁신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토대로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왔다. 공사는 혁신 전담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 전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김 사장은 새 비전과 변화 방향을 담은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행사는 미래세대 비전과 조직 변화 비전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 관점에서 본 공사의 역할을 제시했고, 2부에서는 김 사장이 직접 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전사적 동참을 독려했다. 청년이사회는 올해부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식혜·식초 부문 등 전통식품명인 7명 선정

농식품부, 제95~101호 명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후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경력·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계승하기 위한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